

전주시 “한옥마을 이대론 안돼 확 바꾼다”...양→질 전환

글로벌웰컴센터 건립·다국어 안내서비스 지원

“1000만명 유치보다 500만명 하루 더 숙박으로”

전북 전주시가 국가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계기로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 관광정책을 ‘양’에서 ‘질’로 바꾸기로 했다.

1000만명 유치에만 목매달지 않고 500만명을 유치하더라도 하루 더 묵고 갈 수 있도록 한옥마을 리브랜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4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문화로 특별한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문화특별시 전주 위상강화 △자랑스러운 역사전통문화 △품격있는 한옥마을 △생활문화체육 거점 확충 △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등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우선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을 계기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5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들여 대한민국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다.

특히 한옥마을의 경우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 무장애 열린 관광지 조성, 다국어 안내서비스 지원 등 관광객 수용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장르의 한옥마을 거리공연 연대 운영,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한옥마을 인증제 시행, 향교 길 중심의 주말 상설 공연과 체험거리 운영 등 한옥마을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8일 국가 관광거점도시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옥마을은 지금 상태로 안 된다”면서 “전주한옥마을을 리브랜딩해 숙박과 응대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문화특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종교 문화시설 △전주대사습청 △전주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자랑스러운 역사전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주부성 북동편 성곽 복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풍패지관 서익헌 해체·보수 △



후백제 도성 및 궁성 추정지 발굴조사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완산동 옛 총무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전주대표 공연브랜드 육성 △전주 벼하 트rian날레 계획 △전주대사습놀이와 전주비빔

밥축제 개최 △유네스코 음식점의도 시 기반 구축 △한복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라기 국장은 “전주시는 관광 거점도시 지정과 함께 미래문화 발전 동력을 준비하고 재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밝히고, 특히 한옥마을 관광정책에 대해 “1000만명 유치보다는 500만 명이 하루 더 묵고 갈 수 있도록,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가짜 한약재 감별...국내 연구진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한약재를 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원장 김중열)은 한약자원연구센터 최교야 박사과 동신대 한의학과 이송인 교수 공동연구팀이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외형으로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의 감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딥러닝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방법이다.

연구팀은 비전문가들도 가짜 한약재를 쉽게 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한약재 감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비전문가들도 가짜 한약재를 쉽게 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한약재 감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선 정확히 동정(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한 약재 음편 조각(한

약 조제 원료로 이용되는 한약재 조각)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약재별로 수백 장의 사진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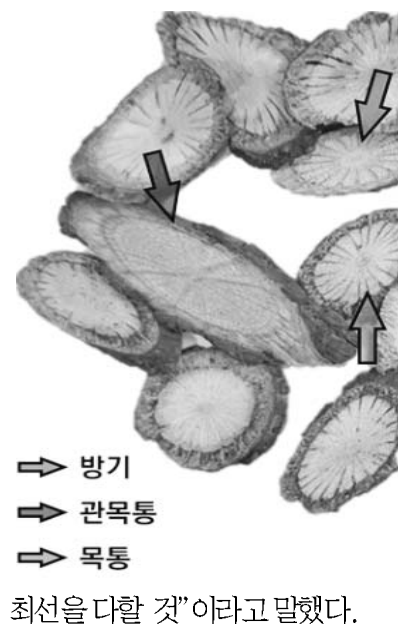
이후 해당 사진 정보를 여러가지 딥러닝 모델에 학습시켜 한약재 감별 정확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딥러닝을 활용한 감별 기술의 정확도는 최대 99.4%로 나타났다. 이는 본초학(本草學)을 전공한 박사가 동일 사진을 육안으로 판정 했을 때의 평균 감별 정확도인 94.8% 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 기술을 한약재 감별에 활용하면 비전문가의 가짜 한약재 오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향후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한약재 유통 시장 등에서 보다 정확한 한약재 사용을 하도록 한약재 감별 스마트폰 앱 개발 등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김중열 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재 감별은 한의학과 인공지능의 융합 가능성을 잘 보여준 결과”라며 “향후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 등 지속적인 한의학과 IT기술의 융합연구를 통해 미래의 학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 방기
- 관목동
- 목동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평군, 점포별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주력

충북 중평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우선 1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아케이드 연결 천정부문을 교체하고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장을 보는 환경을 만든다.

지난해는 노후전기시설을 보수·교체하고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줬다.

전통시장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배송도우미는 올해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움직인다.

배송도우미는 시장의 물품 판매 현황과 장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장을 본 물건을 인근 주차장이나 버스 택시 타는 곳까지 옮겨주는 일을 한다.

점포별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마련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화재발생 시 공제료의 70%까지(연 14만원 내) 지원하는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과 폐업·사망 등에 처한 상인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고양시의회 장사시설연구회 출범

경기 고양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인 ‘장사시설연구회’가 지난 3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장사시설연구회’는 기존 장사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 지역 및 해외사례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제시, 인구 고령화 및 가족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장묘문화 변화를 반영한 선진적인 장사시설 확충 방안을 연구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다.

연구회 회장은 김서현 의원, 부회장은 손동숙 의원이 맡고 있으며, 김수환·박현경·이길용·정관오 의원이 회원으로 참가해 올해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초청 특강은 박재원 글로벌장례문화복지연구원 원장이 맡아 진행한 가운데 고양시의회 장사시설연구회 회원 및 고양시 노인복지과, 고양시정영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김서현 회장은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한 장사정책 개발 및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협업시설로 인식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확충 방안을 위해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코로나가 무서워 작년 12월 유행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확산되고 있다.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성안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우한 폐렴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불안 고조...인천 대학, 중국 유학생 ‘어쩌나’

시민사회 “대학 등 참여 종합대책본부 구성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천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학생들이 개강을 맞아 곧 입국할 예정이지만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가 나서 대학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 이같은 방역 공백을 메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인천 각 대학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인하대와 인

천대에 재학생인 중국 유학생은 각각 700여명, 150여명이다. 이들은 겨울방학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 중국으로 갔다가 다음달 개강에 맞춰 학교로 돌아올 예정이다. 중국 유학생 중 입국이 제한되는 후베이성 거주자는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중국 유학생 대부분이 가족 사생활을, 인하대는 100여명만 가족사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개별숙소에서 지낸다. 문제는 이들 유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제대로 된 방역대책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 장시·충칭시·쓰촨 등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도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 돌아오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학의 관리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대학 간 자체 협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가 대책을 만들어 각 대학에 보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인천 내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들의 규모 등만 파악할 뿐 방역대책은 손도 못 대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개강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대학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대학이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종합대책본부를 즉각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외국인 밀집시장 802곳 점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식료품업소 802곳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일 외국인 밀집지역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81곳과 주변 음식점 721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민간 합동점검에 나선다.

민간 합동 점검반은 시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됐으며 5명씩 15개 점검반으로 나뉘어 현장에 투입된다. 5명은 공무원 3명(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과 시민 2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비롯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

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을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관계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박쥐나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 법이 금지한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취급은 불법으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의 캠페인도 진행된다. 중국인이 밀집한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마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다. 방역과 소통도 병행한다.

뉴스1

속초시립박물관 ‘홍남탈출’ VR 선보

강일 속초시립박물관이 ‘1950 흥남탈출’이라는 주제로 2021년부터 관람객들에게 가상현실(VR) 전시 콘텐츠를 개발한다.

관람객에게 역사적 사실을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증강현실(AR) 등 실감 기술을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을 관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12월에 펼쳐진 흥남철수 작전을 모티브로 했다.

한국군과 미군, 피난민이 펼치는 철수 작전을 가상현실로 제작해 긴박한 피난·탈출 상황, 속초에 정착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제1차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